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3-30호 | 2023년 11월 03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정태호 | idp.theminjoo.kr

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 윤정부의 무분별한 R&D 예산삭감

남 국 현 연구위원(경제학 박사)

《 요약 》

■ R&D 예산 현황

- 윤석열 대통령의 “나눠먹기식, 갈라먹기식 R&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”는 지적에 R&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의 미래가 무너짐
 - 정부의 R&D 예산은 내년에 25.9조원으로 올해 31조보다 16.6%나 삭감
 - 부처별 R&D 예산은 과기정통부 8,720억원, 산업부 6,921억원, 방사청 4,505억원 순으로 삭감
 - 중기부와 농업분야의 R&D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,493억원, 2,477억원 감소하였고, 복지부 779억원, 질병청 270억원, 식약처 47억원 등 R&D 예산만 소폭 증가에 그침

■ 정부 R&D 예산편성의 문제점

- ① 교육부는 R&D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예산축소
- ② 지역균형발전 R&D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
- ③ 중소기업 소재·부품·장비 및 상용화·실용화 예산의 대폭 축소
- ④ 탄소중립기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의 전면 삭감
- ⑤ ‘우수’ 평가를 받은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정부의 R&D 예산삭감의 무원칙 확인
- ⑥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R&D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
- ⑦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운영비 삭감으로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워짐
- ⑧ 과학기술기본법의 정부 R&D 예산 편성 과정을 위반하여 R&D 예산 변경
- ⑨ 정부 R&D 예산 6조원의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1만 8천개가 사라짐

■ 정책제언

- 국회 차원에서 윤정부의 R&D 예산삭감을 철회하고, 예산증액 방안 마련
- 정부의 100조원 R&D 펀드 조성으로 첨단 미래산업 및 기초과학에 집중투자
- 정부 R&D 예산편성의 공정성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
-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공동으로 R&D 예산 재검토와 복원 촉구

▶ 키워드: R&D 예산, 과학기술, 운영비, R&D 사업수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R&D 예산 현황

- 윤석열 대통령의 “나눠먹기식, 갈라먹기식 R&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”는 지적에 R&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의 미래가 무너짐
 - 외환위기나 금융위기, 코로나 등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에도 연구개발 예산만은 늘렸었지만, 지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구현장이 갈피를 못 잡은 상황
 - 정부의 R&D 예산은 내년에 25.9조원으로 올해 31조보다 16.6%나 삭감
 -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도
- 정부의 R&D 예산삭감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저하 및 국가 성장 잠재력 하락
 -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의 80% 수준이고, 기술격차는 3.3년으로 지속적인 R&D 투자 필요
 - 미국대비 기술('18년 → '20년) : 한국 77 → 80, 중국 76 → 80, 일본 88 → 87, EU 95 → 96
 - 기초연구 분야의 -6.2% 예산삭감으로 미래준비를 위한 연구개발이 중단되고, 단기성과 위주의 과제가 증가하여 과학기술 기초체력 저하 우려

<표 1> 부처별 R&D 예산 및 사업수 현황(단위: 억원, %, 개)

구분	2023년		2024년		증가분	
	예산액	사업수	예산액	사업수	예산액(%)	사업수
과기정통부	98,928	355	90,208	380	-8,720(-8.8)	25
산업부	53,759	246	46,838	195	-6,921(-12.9)	-51
방사청	50,929	73	46,424	74	-4,505(-8.8)	1
교육부	35,014	24	6,823	8	-28,191(-80.5)	-16
중기부	17,701	47	13,208	32	-4,493(-25.4)	-15
해수부	8,783	108	7,147	106	-1,636(-18.6)	-2
농진청	9,014	59	7,174	52	-1,840(-20.4)	-7
복지부	7,566	75	8,345	73	779(10.3)	-2
국토부	5,555	94	4,225	82	-1,330(-23.9)	-12
국조실	5,544	31	5,356	31	-188(-3.4)	0
환경부	3,894	43	2,988	38	-906(-23.3)	-5
농식품부	2,696	23	2,059	18	-637(-23.6)	-5
산림청	1,574	24	1,257	21	-317(-20.1)	-3
식약처	1,405	15	1,452	17	47(3.3)	2
질병청	1,417	21	1,687	19	270(19.1)	-2
기타	14,257	227	11,185	204	-3,072(-21.5)	-23
합계	318,036	1,465	256,376	1,350	-61,660(-19.4)	-115

자료: 열린재정, 기획재정부

- 부처별 R&D 예산안을 보면 과기부가 '23년 98,928억원에서 '24년 90,208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, 그 다음으로 산업부, 방사청, 중기부 순으로 많이 감소함
 - 산업부는 전년대비 6,921억원 감소하였고, R&D 사업수는 '23년 246개에서 '24년 195개로 51개 사업이 폐지되었고, 그 다음으로 교육부 16개, 중기부 15개, 국토부 12개 순으로 사업이 많이 폐지됨
 - 중기부 R&D 예산은 전년대비 4,493억원 감소하였고, 농진청과 농식품부를 합한 농업분야 R&D 예산도 2,477억원 삭감되었으며, 복지부, 식약처, 질병청 R&D 예산만 소폭 증가에 그침

2. 정부 R&D 예산편성의 문제점

- 교육부는 '23년도의 R&D 사업을 '24년도에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R&D 예산 축소
 - 대학혁신지원(R&D) 사업은 '24년도에서 R&D 명칭을 삭제하고 표기하여 R&D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, 이런 방식으로 R&D 사업수가 '23년도 24개에서 '24년도 8개로 축소
 -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(R&D) 등 인문사회 학술연구 사업도 R&D 명칭을 삭제하여 R&D 예산을 축소하였고, 학술단체지원(R&D)은 기초학문 확산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R&D 예산에서 삭제됨

<표 2> '23년 교육부 예산(단위: 억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
대학혁신지원(R&D)	8,583
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(R&D)	5,512
4단계두뇌한국21사업(R&D)	4,168
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(R&D)	376
한국학 진흥(R&D)	226
학술단체지원(R&D)	67

자료: 열린재정, 기획재정부

<표 3> '24년 교육부 예산(단위: 억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
대학혁신지원	10,046
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	4,438
4단계두뇌한국21사업	5,247
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	362
한국학 진흥	218
기초학문 확산지원	122

자료: 열린재정, 기획재정부

○ '24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R&D 예산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삭감

-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&D 예산은 '23년 9,748억원에서 '24년 4,938억원으로 49.3%(4,810억원) 감소하여 전체 R&D 예산이 16.6%에 감소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
 -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 R&D 예산을 2,381억원 삭감하였고,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(1,083억원),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(537억원),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(459억원) 순으로 크게 삭감됨
 - 중기부는 지역 R&D 예산을 1,520억원 삭감하였고, 지역특화산업육성(660억원),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(262억원), 산학연CollaboR&D(216억원) 순으로 삭감됨
 - 국토부는 지역사업 36건에서 R&D 예산을 1,336억원 삭감하였고,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(115억원), 지하공간 활용 도시기간 복합 플랜트 실증 연구(54억원) 등 삭감으로 지역사업 축소
 - 과기부는 지역 R&D 예산을 800억원 삭감하였고, 연구개발특구육성(283억원),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 사업(180억원),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(105억원) 순으로 삭감됨

○ 중소기업 소재·부품·장비 및 상용화·실용화 R&D 예산의 대폭 축소

-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포함된 R&D 예산은 '23년 2조 2,923억원에서 '24년 2조 857억원으로 2,066억원 감소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약화가 우려됨
 - 산업부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('20~'25년)은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, 전정부에서 핵심소재기술 확보로 추진한 사업을 근거없이 1,842억원 전액 삭감함
- 중소기업의 상용화·실용화 R&D 예산은 '23년 4,618억원에서 '24년 1,666억원으로 2,952억원 감소(63.9%)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자립화 기반 역량의 약화가 우려됨
 - 중기부는 중소기업상용기술개발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1,871억원(66.7%) 삭감하였고, 농촌진흥청은 농업실용화기술개발 예산을 118억원(88.7%) 삭감하여 농업기술의 사업화 지원이 어렵게 됨

○ 탄소중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R&D 예산의 전면 삭감

-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R&D 예산은 전년대비 1,769억원 삭감되어 탄소중립 기술발전을 저해함
 -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276억원, 창업성장기술개발 172억원, 그린뉴딜유망기업100 141억원 순으로 삭감
 - EU 기후대응기금은 GDP의 약 2~3% 수준,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은 GDP의 0.1% 수준으로 부족
- 산업부의 에너지및자원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,304억원 삭감되었고, 그 중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이 약 1,080억원 삭감
 - 차세대 Hybrid 배전 네트워크 308억원, 재생에너지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114억원 등 예산 감소

○ ‘우수’ 평가를 받은 R&D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정부의 R&D 예산삭감의 무원칙 확인

- 정부는 ‘우수’, ‘적절’ 등급을 받은 R&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R&D 사업평가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, 정부의 R&D 예산삭감이 원칙없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
 - R&D 사업평가는 먼저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 우수평가를 하고,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적절성을 평가를 시행함

<표 4> R&D 사업평가 및 예산변동(단위: 억원, %)

부처명	세부사업명	자체평가	적절성	예산액	감소율
과기부	ICTR&D혁신바우처지원	우수(95)	적절	-383	95.2
과기부	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	우수(91.2)	적절	-229	17.8
과기부	연구산업육성	우수(90)	적절	-102	49.9
산자부	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	우수(86.8)	적절	-507	62.5
산자부	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	우수(91.2)	적절	-323	43.4
산자부	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~	우수(87.4)	적절	-244	92.5

자료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

○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'24년도 R&D 예산 전액 삭감

- 장기적인 연구과제임에도 윤정부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, 연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함
 - '24년도 예산안에서 276개 R&D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, 총 금액은 1조 7,294억원에 달함
 - 전략핵심소재지립화기술개발('25년 종료) 1,846억원,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('27년 종료) 469억원,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('28년 종료) 410억원, 다목적실용위성개발('25년 종료) 375억원,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('27년) 231억원,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개발('31년 종료) 181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전액 삭감

○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운영비 삭감으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짐

-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~30% 연구개발 및 운영비 예산삭감으로 연구과제 수행 및 인력양성 사업이 중단되고, 과학기술 인력의 유출과 석·박사 후 졸업생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됨
 - 출연연구기관의 R&D 예산은 '23년 4조 2,297억원에서 '24년 3조 9,171억원으로 3,126억원 감소
 - 47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은 한 곳을 제외하고, 모두 연구 운영비 예산삭감, 47개 연구기관은 전년대비 총 5,425억원(-14.8%)의 예산이 감소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저하가 우려됨
 - 반면 경제, 인문, 사회 분야의 연구기관은 25곳 중 17곳(68%)이 예산 감소, 8곳(32%)이 예산증가, 25개 연구기관은 전년대비 총 214억원(-3.9%) 예산 감소

○ 과학기술기본법의 정부 R&D 예산 편성 과정을 위반하여 R&D 예산 변경

- 정부 부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연구개발 예산안을 심의하고, 편성·확정한 R&D 예산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면 재조정되어 정부 R&D예산 편성제도가 무너짐
- 과기부는 R&D 예산편성 내용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,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8월에 제출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위반

○ 정부 R&D 예산 6조원의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1만 8천개가 사라짐

- 연구개발비가 1억원 감소할 때, 고용인원은 약 0.3명 감소하고, 6조원의 R&D 예산감소는 1만 8천명의 과학기술 인력을 감소시키고, 과학기술 현장의 인력유출과 고용불안을 유발
- 연구개발비의 고용탄력성은 0.028로 분석, 곧 연구개발비 1% 증가는 고용 0.028% 증가(홍우형, 2018)

3. 정책제언

○ 국회 차원에서 윤정부의 R&D 예산삭감을 철회하고, 예산증액 방안 마련

-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R&D 예산에 대해 예산안을 심의·조정하고, R&D 예산을 증액하는 수정안 마련
- 국정감사 기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 부처가 일괄적으로 R&D 예산을 삭감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,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, 재검토하도록 요구

○ 정부의 100조원 R&D 펀드 조성으로 첨단 미래산업 및 기초과학에 집중투자

-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R&D 모펀드 조성(50조원)과 민간투자(50조원)으로 10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미래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에 R&D 투자 지원
-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, 이차전지, 탄소중립·에너지 등 미래산업 혁신의 R&D 사업 지원
- 중소·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,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R&D 사업에 집중 투자

○ 정부 R&D 예산편성의 공정성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

- 과기부는 '24년 R&D 예산을 올해보다 2.5% 늘려 편성했으나, 6월 윤 대통령의 발언이후 한달 만에 전면 삭감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의 합리적 근거 부족 및 공정성 결여
- '우수', '적절' 등급을 받은 R&D 예산과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R&D 사업을 대폭 삭감하여 정부 예산편성의 객관적 심의과정 필요

○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공동으로 R&D 예산 재검토와 복원 촉구

- 대한수학회, 한국물리학회 등 18개 기초과학단체의 R&D 예산 삭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
-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학생회가 삭감을 반대하는 공동성명 제출
- 과학기술 분야 10개 단체들이 '국가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연대회의'를 결성하여 '연구비 카르텔'과 '비효율'의 사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

<참고자료>

□ 정부 부처별 R&D 예산편성 분석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&D 예산은 정부출연기관 2,757억원, 통신 분야 2,535억원, 공공연구성과활성화 836억원,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840억원 순으로 삭감됨
 -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&D 예산은 40개 연구기관에서 운영비로 5,698억원 감소, 35개 연구기관에서 시설지원비로 2,205억원 증가
 - 연구 운영비 예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92억원, 기초과학연구원 313억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9억원 순으로 가장 많이 삭감되었고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곳만 735억 증가됨
 - 통신 분야의 예산은 84개 사업에서 4,310억원 감소, 28개 사업에서 1,774억원 증가
 - 정보통신융합산업 1,085억원, 인터넷융합산업 830억원, 인공지능데이터진흥 440억원,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237억원, SW산업진흥 100억원 순으로 통신분야 예산이 삭감됨
 -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예산은 15개 사업에서 1,145억원 감소, 6개 사업에서 157억원 증가
 -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675억원, 연구개발특구육성 283억원, 산학협력활성화 지원 184억원 순으로 삭감되었고, 이들 중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434억원 삭감됨
 -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은 56개 사업에서 2,908억원 감소, 32개 사업에서 2,068억원 증가
 - 나노·소재기술개발 379억원,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166억원, 첨단융합기술개발 101억원 순으로 감액
 - 이외에도 사회문제해결 446억원, 기초연구진흥 336억원, 문화및관광 290억원, 과학기술기반 조성 203억원 등 R&D 예산이 삭감됨
- 산업통상자원부 R&D 예산은 산업혁신지원 분야에서 4,060억원 감소하고, 에너지및자원개발 분야에서 3,304억원 감소하여 총 7,364억원 삭감됨
 - 산업부 R&D 예산 중 산업혁신지원 분야 예산은 23년 기준 41,822억원(77.2%)으로 130개 사업에서 10,156억원 삭감되었고, 41개 사업에서 6,096억원이 증액됨
 - 제조기술, 수송기술, 스마트전자기술 등 주력산업진흥 예산은 58개 사업에서 4,048억원 감소, 19개 사업에서 1,986억원 증가
 -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,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9개 모든 사업에서 2,213억원이 삭감되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 등 지역혁신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김
 - 우수기술, 산업기술, 공공기술 등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예산은 22개 사업에서 1,931억원 감소, 8개 사업에서 1,031억원 증가
 - 중견기업육성 예산은 9개 사업에서 504억원 감소, 2개 사업에서 31억 증가 등 총 473억이 삭감되어 중견기업의 기술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혁신지원 사업의 중단이 우려됨

-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,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등 기타 예산은 7개 사업에서 588억원 감소
- 산업부 R&D 예산 중 에너지및자원개발 분야 예산은 23년 기준 12,380억원(22.8%)으로 70개 사업에서 4,537억원 삭감되었고, 16개 사업에서 1,233억원이 증액됨
- 재생에너지, 원전 등 에너지기술개발 예산은 55개 사업(신재생 27개, 화력·가스 등 8개, 원전 7개 사업 감소)에서 2,008억원 감소(신재생 1,064억원), 10개 사업에서 558억원 증가
-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은 '20년부터 '25년까지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한 사업으로 1,864억원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됨
- 실증연구 기반 구축, 핵융합실험로개발 등 에너지기술기반확충 예산은 10개 사업에서 588억원 감소,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개 사업만 56억원 증가
- 방사물폐기물관리 예산은 2개 사업에서 8.5억원 감소, 3개 사업에서 88억원 증가

○ 교육부의 R&D 예산은 전년대비 80.5% 감소하였고, R&D 사업수는 명의변경으로 16개 감소

- 교육부의 R&D 예산은 '23년 3조 5,014억원에서 '24년 6,823억원으로 2조 8,192억원 감소
-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,363억원, 개인기초연구 69억원, 인문사회 기초연구 55억원, 인문학 진흥 50억원,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27억원 순으로 R&D 예산이 감소
- R&D 사업수는 '23년 24개에서 '24년 8개로 16개 사업의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수가 감소됨
- 대학혁신지원 8,583억원,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5,512억원,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4,168억원, 전문대학 혁신지원 4,020억원,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,040억원 등 사업명을 변경하여 '24년 R&D 예산에서 삭제됨
-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376억원,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34억원, 한국학 진흥 226억원, 학술단체 지원 67억원 등 인문사회 학술연구 사업도 사업명을 변경하여 R&D 예산에서 삭제됨

○ 중소벤처기업부 R&D 예산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3,349억원, 지역중소기업육성 1,055억원, 기타 사업 89억원 순으로 삭감됨

- 중기부 R&D 예산은 43개 사업에서 6,139억원 감소, 6개 사업에서 1,646억원 증가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예산은 32개 사업에서 4,995억원 감소, 6개 사업에서 1,646억원 증가 등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및 상용화 기술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됨
- 지역중소기업육성 예산은 지역특화산업육성, 규제자유특구 등 6개 사업에서 1,055억 삭감되었고,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증가된 예산은 없어 지역의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됨
- 소상공인·전통시장지원 37억원, 창업환경조성 37억원, 중소기업인력지원 15억 등 기타예산 감소

○ 해양수산부 R&D 예산은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765억원, 해양수산연구개발 441억원, 어업인소득안정지원 234억원, 출연연구 기관지원 229억원 순으로 삭감됨

- 해수부 R&D 예산은 77개 사업에서 2,422억원 감소, 36개 사업에서 753억원 증가

-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예산은 765억원 감소하였고,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256억원, 해양수산 생명공학기술개발 168억원, 극지및대양과학연구 151억원, 해양기술역량강화 사업 141억원 순으로 감소
- 해양수산연구개발 예산은 441억원 감소하였고,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 170억원, 항만물류기술개발 169억원, 해양안전기술개발 42억원, 해양수산R&D역량강화 사업 31억원 순으로 감소
- 어업소득안정지원 예산은 8개 사업에서 268억원 감소, 1개 사업에서 34억원 증가
- 출연연구 기관지원 예산은 극지연구소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, 국립수산물 학원 등의 운영비, 연구비 예산 229억원 삭감

○ **농업분야 R&D 예산은 농촌진흥청 1,848억원, 농림축산식품부 619억으로 총 2,467억원 삭감**

- 농촌진흥청 R&D 예산은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,476억원,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299억원, 농가경영능력 향상 92억원 순으로 삭감,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20억원 증가
-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은 36개 사업에서 1,612억원 감소, 4개 사업에서 136억원 증가 등 예산감소로 농업생산 및 실용화 기술이 저하되고, 농업 경쟁력 약화
 - 미생물활용농업기술, 신품종 적응연구 등 지속가능한농업연구 예산은 10개 사업에서 482억원 감소
 - 원예특용자원생산연구, 농축산물데이터활용기술 등 농업신성장동력 연구 예산은 9개 사업에서 323억원 감소
 - 농업과학기술기반연구 186억원, 현장실용화농업기술 158억원, 지역농업연구 144억원 등 예산 감소
- 농식품부 R&D 예산은 병해충대응기술, 기술사업화지원, 스마트팜혁신기술 등 18개 사업에서 농업신산업 육성 예산 635억원 감소

○ **국토교통부 R&D 예산은 66개 사업에서 1,840억원 감소, 25개 사업에서 520억 증가**

- 국토부 R&D 예산은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 273억원, 철도기술연구 215억원, 도시건축연구 191억원, 플랜트연구 189억원, 건설기술혁신 134억원, 교통물류연구 82억원 순으로 삭감
 - 국토교통기술역량강화 분야에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예산 283억 전액 삭감되었고, 본 사업에서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되었지만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게 됨
 - 철도기술연구는 15개 사업에서 270억 감소, 4개 사업에서 55억원 증가
 - 도시건축연구는 주거환경, 도시계획, 대중교통인프라 관련 연구로 R&D 예산삭감에 도시재생 사업 축소됨
 - 플랜트연구는 6개 사업 모두 예산이 삭감되었고, 향후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

○ **기획재정부 R&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 회계 중 탄소중립기반구축 분야의 73개 사업에서 2,796억원 감소, 동 분야의 10개 사업에서 1,026억 증가, 총 1,769억원 삭감**

-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,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대폭 예산을 삭감하여 탄소중립 기술발전을 저해함
 - 탄소중립기반구축 분야 중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656억원, 과학기술 494억원, 교통및물류 394억원, 환경 121억원 순으로 예산이 삭감됨